



원자력과사회 ②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소통법

이 책의 원서는 OECD가 영어 및 불어로 출판한 아래 도서입니다.

Society and Nuclear Energy
Case Histories of Practical Communication Experiences

Société et énergie nucléaire
Études de cas sur des expériences pratiques de communication

© OECD 2005
All rights reserved.

© 2010 PUBLISHER for this Korean editi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OECD, Paris.

이 책의 © 2010 한국어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파리의 OECD의 승인을 받고 출판하였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어판이 원서에 충실하게 번역되었음을 책임지고 보증합니다.



원자력과사회 ②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소통법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의 경제 및 사회,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30 개 민주국가 정부가 함께 일하는 독특한 포럼이다. OECD는 또한 새로운 개발과 공동관리, 경제정보, 노령화 등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각국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 기구는 회원국의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구하고, 우수한 관례를 확인하여 국내 및 국제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OECD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OECD의 업무를 관장한다. OECD 출판국은 이 기구의 통계자료 및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관한 연구 뿐 아니라 협약, 지침, 기준 등을 회원국의 동의하에 배포한다.

* * *

이 저작물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된다. 여기에 표명된 견해와 주장은 기구 또는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원자력기구

OECD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는 1958년 2월 1일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유럽경제협력기구) 유럽원자력기구(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72년 4월 20일 일본이 최초의 비유럽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OECD 회원국 중 28개국(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대한민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 현재 NEA에 가입한 상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회원국의 지위를 가진다.

NEA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제협력을 통해 회원국들에서 원자력의 과학적, 기술적, 법

적 기반 확보와 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이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에 따른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이용을 도모한다.

- ※ 공인된 평가를 제공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조성함으로써, 각국 정부의 원자력 정책결정 및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관한 OECD의 폭넓은 정책분석을 위한 자료를 마련한다.

NEA의 세부 활동영역은 원자력 관련 활동의 안전제어 및 규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사선 방호(radiological protection), 원자력과학, 핵연료 주기(fuel cycle)의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분석, 원자력법과 책임소지 연구, 정보공개(public information) 등을 포함한다. NEA 자료보관소(Data Bank)는 참여국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정보와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업무에 있어 NEA는 비엔나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 맺은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준수하며, 이를 포함한 여타 국제원자력 기구들과 공조한다.

© OECD 2005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이 책의 내용을 복제, 전재, 번역하는 것을 금한다. 책 내용의 복제, 전재, 번역을 위해서는 이메일 rights@oecd.org 또는 팩스 (+33-1) 45 24 13 91을 이용해 OECD Publishing 측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을 복사하기 위한 허가 신청은 Centre Français d'exploitation du droit de Copie, 20 rue des Grands-Augustins, 75006 Paris, France(contact@cfcopies.com)로 해야 한다.



머리말

원자력의 위험 및 혜택에 대한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정책입안자들의 핵심주제이다. NDC(Committee for Technical and Economic Studies on Nuclear Development and the Fuel Cycle: 원자력에너지와 핵연료 주기연구에 관한 기술 및 경제위원회)의 지원 하에 2002년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원자력 분야와 관련된 의사결정 절차를 개발하려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제공했다. 2002년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NDC는 2003-2004 업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제사례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고서에 그 연구의 주요 결과가 수록되어있다.

7개국의 산업체 혹은 정부기관의 전문가들이 13건의 연구사례를 기고했으며 여기에는 원자력 프로젝트 및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구체

적인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기술되어있다. 연구사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원자력 분야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경제, 환경, 사회적 차원과 의사결정권자 및 시민단체 각각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커뮤니케이션 시행자들이 미래에 사용할 지식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및 환경에서의 경험으로부터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사무국이 자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었다. NDC가 제공한 검토와 논평의 도움을 받았지만 회원국 정부의 견해를 자동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으며,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다.

∞ 감사의 글 ∞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KINS의 20년은 곧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의 20년인 바, 그동안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소처럼 진중하고 묵직하게, 허투루 걷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원자력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지금, 원자력 안전의 사명과 책임감은 더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진정한 화두는 안전입니다. 우리 사회가 원자력의 성과를 다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고민 또한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 고민의 바탕에는 ‘소통’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질 높은 안전을 갈망하면서도 안전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낯설어합니다. 소통의 방식 또한 서투른 게 사실입니다.

때마침 안전과 소통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제공해주는 『원자력과 사회』를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책은

무척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자력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전문가들만의 몫이 아니며, 위협에 대한 소통은 상호 이해,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리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매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관계자뿐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와 같은 다양한 이들의 활발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에 원자력이 제 기능을 발휘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번역서는 『원자력과 사회 I : 신뢰를 부르는 성공적인 소통법』, 『원자력과 사회 II :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소통법』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에서는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2권에서는 1권에서 다룬 연구 결과와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실제 사례의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독자는 원자력 분야 사람들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자력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더욱 열려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계, 정치권, 시민단체,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관이 건강하게 부딪치고 소통할 때 원자력 에너지는 비로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KINS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하는 『원자력과 사회』 출판 과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국에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OECD/NEA의 루이스 에차바리 (Luis E. Echávarri) 사무총장과 출판부 신시아 가넌 (Cynthia Gannon-Picot) 씨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대중 속 원자력을 뿌리내리기 위해 이 책의 발간을 기획한 KINS 통합커뮤니케이션 팀의 박창호 팀장과 이계휘 님, 황선철 님, 윤연화 님, 김선진 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KINS 2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총괄해주신 이성규 원자력안전본부

장님과 20주년 TF 팀의 정수진 님, 여동희 님, 김지환 님, 정진아 님의 따뜻한 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성실함과 적극성으로 이 책의 번역과 출판을 위해 애써주신 인트랜스의 안진환 사장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원자력과 사회』가 ‘안전’과 ‘소통’에 대한 여러분의 커다란 열망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12월 대덕에서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원자력과사회 ②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소통법

⌘ 머리말 8

01 서론 14

⌘ 배경 14

⌘ 자료 15

02 사례 브리핑 19

⌘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19

⌘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29

⌘ 원전시설의 장기간 폐쇄 이후 재가동 31

⌘ 안전 및 보안 33

03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협의의 포괄적 측면과 국가별 사례 36

⌘ 포괄적 관찰과 명백한 메시지 36

⌘ 국가 또는 사례별 특징 41

04 원자력의 다양한 혜택 및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전문가, 사회의 인식: 특정 관심사 및 견해차 45

⌘ 원자력 또는 특정 시설과 관련된 혜택 인식 45

⌘ 원자력 또는 특정 시설에 대한 리스크 인식 46

⌘ 관심사 및 견해차의 특징 47

-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 50
- ⌘ 원전시설의 장기간 폐쇄 이후 재가동 51
- ⌘ 안전 및 보안 52

05 커뮤니케이션 참여방식 53

- ⌘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가 의사결정 절차 54
-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62
- ⌘ 원전시설의 장기간 폐쇄 후 재가동 68
- ⌘ 안전 및 보안 73

06 사례 작성자들이 강조한 교훈 77

- ⌘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77
- ⌘ 원자력 지지자와 지원활동자간의 네트워킹 79
- ⌘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80
- ⌘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81
- ⌘ 정치권과의 조화 81
- ⌘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의 관계 82

07 잠정적인 결론, 임박한 문제 86

- ⌘ 커뮤니케이션 사례 87
- ⌘ 커뮤니케이션에 내포된 위험 89
- ⌘ 정치적 의사결정 89
- ⌘ 미래를 위한 제안 90

⌘ 부록 1

- ⌘ 주요 기고자 리스트 94



01 서론

배경

원자력과 사회¹에 대한 데스크스터디는 원자력개발위원회(NDC) 2001-2002 업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원자력 문제에 대한 토론은 더 이상 전문가에게만 한정되지 않았고, 원자력 관계자와 정치권의 의사결정권자 그리고 시민단체 간에 많은 유형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리스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이해,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리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원자력개발위원회(NDC)는 2003-2004 프로젝트로서, 원자력정책 의사결정과 관련해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의 사례

1. OECD/NEA (2002) “원자력과 사회 I : 신뢰를 부르는 성공적인 소통법(Society and Nuclear Energ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ISBN 92-64-18494-5. Paris: OECD 출판국

결정과 관련해 회원국들과 시민사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의 사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회원국 전문가들에게 그런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내용과 여기에서 얻은 교훈을 강조한 보고를 요청했다. 이 자료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NEA의 향후 활동에 대한 배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조사 방향과 이 배경자료를 구성하기 전에 많은 포괄적 주제가 선정되었다. 제2장에서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한 후 각 주제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03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협의에 대한 포괄적 측면과 국가별 또는 사례별로 내용 확인
- 04 원자력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과 리스크에 관한 의사결정권자, 전문가, 사회의 인식을 검토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
- 05 의사결정권자, 전문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참여방식을 확인
- 06 사례 작성자들이 강조한 교훈 검토
- 07 회원국의 전문가 및 대표들이 경험사례를 활용해 원자력에 관한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및 의사결정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과제 제시

자 료

이 자료의 제2장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13건의 사례에 대한 요약이다. 순서는 보고된 상황 및 사건 또는 경험의 형태에 따른다.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DMP (Decision-Making Process: 의사결정 절차)

5건의 사례가 제시된다. 각 사례는 국가 정책 의사결정의 복잡한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한 훌륭한 통찰을 제공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의 이해관계 및 전략에 따른 각기 다른 입장을 기술하고 분석한다.

- ⌘ 핀란드의 보고서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관련 커뮤니케이션 즉, 새로운 원전건설을 위한 “원칙적 의사결정(decision in principle, DiP)”을 제시한다.
- ⌘ 벨기에의 3개 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을 기술한다.
 - ⇒ AMPERE(an expert Commission to Analyse the Production Modes of Electricity and the Redeployment of Energies: 전기생산방식 및 에너지전환분석 전문위원회)의 경험.
 - ⇒ 원자력의 단계적 폐기에 관한 국회의 DMP 기간 중 관련 정당들의 행동, 태도, 영향.
 - ⇒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대중적 협의.
- ⌘ 미국의 보고서는 유카 산(Yucca Mountain) 연방 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의회 표결의 핵심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다양한 상황을 기술한 3개 보고서는 드라이캐스크(dry-cask)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원활동 및 정보제

공 내용을 다룬다.

- ⌘ 미국의 보고서는 아이오와주의 유일한 원전시설의 독립적인 사용후핵연료 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다. 연방의 허가 절차에는 지원활동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건설이 시작된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 ⌘ 헝가리의 보고서는 팩스(Paks) 원자력발전소가 지역의 이해 및 지지와 현지 저장시설에 대한 시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 ⌘ 스페인의 보고서는 트릴료(Trillo) 원자력발전소의 현지 저장 시설에 대한 지역의 동의와 규제허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집중 조명한다.

원전시설의 장기간 폐쇄 이후 재가동

2개의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특수 구성팀의 다각적인 노력이 서술되고 있다.

- ⌘ 캐나다의 보고서는 온타리오주 피커링에이(Pickering-A)발전소가 가동허가 연장을 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어떻게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도를 했는지 보여준다.
- ⌘ 일본의 보고서는 JNC(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일본핵주기개발연구소)가 심각한 안전상의 실수 이후, 시 당국의 시설재가동에 필요한 토카이 주민의 신뢰와 이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설명한다.

안전 및 보안

스페인의 3개 보고서는 서로 다른 사건들을 본보기 삼아 각각의 위기대응 및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실례를 제공한다.

- ⌘ 아세리녹스(Acerinox) 제철소 방사능사고(비원전분야)의 경우, 언론의 반항을 유발했으며, CSN(Nuclear Safety Council: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 ⌘ 후스마도(Juzbado) 연료생산시설의 비방사능사고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어떤 경우든 시설의 안전성은 위협받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전달했다.
- ⌘ 환경운동가 집단의 소리따(Zortita) 원자력발전소 침입에 관한 대중매체 보도 때문에 발전소 경영진이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02 사례 브리핑

회원국들이 제공한 13개 리포트는 4가지 다른 유형의 상황, 경험 혹은 사건을 다룬다. 각 사례의 간략한 개요를 상황(국가의사결정프로세스, 임시저장, 재가동, 안전/보안) 순으로 열거한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사례의 대비는 특히 흥미로운데, 이들은 전체 보고서 스펙트럼의 양 극단을 형성하고 있다. 하나는 핀란드의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위한 원칙적 의사결정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력의 단계적 폐기에 관한 벨기에 의회의 의사결정이다. 추가로 심화 토론이 제시된다.

☞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

핀란드: “핀란드의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칙적 의사결정”(공익사업 보고서) TVO의 보고서

1993년 핀란드 의회는 핀란드에 새로운 원전시설을 건설하는 길을 열수 있었던 DiP(원칙적 의사결정)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후 전력소비는 매년 2-2.5%씩 증가했다. 전력수요의 15%를 수입에 의존했으며 이 비율은 더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핀란드 정부는 1997년 “에너지전략보고서(Energy Strategy Report)”에서 이 상황을 분석했다. 미래에 대비할 새로운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익사업체인 TVO와 포르툼(Fortum) 두 기업은 기존의 원자력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각각 EIA에 착수했다. EIA 단계 동안, 커뮤니케이션은 잠재 후보지역 주민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되었다. 1999년 발표된 EIA 보고서는 입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 두 기업은 TVO가 2개의 후보지역인 올킬루오토(Olkiluoto)와 로비사(Loviisa)에 동등한 비중을 두고 새로운 건설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1999년 신 정부는 교토의정서 및 유럽의무공유협약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에너지정책 성명을 발표했다. TVO는 2000년 11월, 제5원전 건설과 관련해 원칙적 의사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IA 및 원칙적 의사결정 적용절차에 의거한 법적 토대에 맞추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지역의회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원칙적 의사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새로운 원전시설의 건설을 수락해야 하는, 원

전 건설 및 부지사용계획 법안 허가의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다.

원칙적 의사결정 적용 단계 동안의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발전소를 국가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필수적인 요소로 통합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가격을 보장하고 전력의 수입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데 주력했다.

TVO는 행정업무상의 프로세스에 노력을 집중했다. 이와 병행해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이익집단과 기관, 일반시민, 정치가, 그리고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 프로세스는 사례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분석된다.

원자력을 지지하는 2개 단체가 이 비공식적 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노동조합과 EIO(the Finnish Confederation of Industry using its Economic Information Office: 핀란드 경제정보산업연맹사무국)이다. EIO는 새로운 원전에 대한 기본 요지와 실상 및 수치를 실은 브로셔를 발간했다. 이 브로셔는 전국에 배포되었고 세미나를 통한 설명회 역시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이 단체들은 제5원전이 비즈니스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집중하고 그로써 복지사회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2001년 1월 “원칙적 의사결정”을 가결했다(찬성 10, 반대 6, 기권 1). 후에 의회는 위원회의 연구 및 보고를 통해 원칙적 의사결정의 3가지 세부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2002년 5월의 표결에서 원칙적 의사결정은 가까스로 다수를 유지했다(전체의 약 54%인 찬성 107, 반대 92).

논의

핀란드 사례에 나타난 장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즉, “전문가, 정당, 노동조합, 산업체 및 비정부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통일성이

다. 특히 산업연맹은 공익사업체와 함께 새로운 원자로를 지지하는 적극적이고 분명한 역할을 했다. TVO에 의하면 원칙적 의사결정에 관련된 국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새로운 원전시설을 국가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필수 요소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산업 관련 단체들은 이 “정치적 논점”에 새로운 전력공급원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는 주장을 더하고 복지사회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핀란드의 반원자력 단체들은 대중포럼을 개최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在生)에너지(태양열, 수력, 풍력, 조력, 지열과 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웁긴이) 자원으로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산업 및 경제 단체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산업계는 핀란드의 삼림으로부터 바이오매스(biomass: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식물체 및 동물 폐기물-웁긴이)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을 역설했다. 이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은 재생에너지 개발에 찬성하는 통상산업부의 프로그램과 부합했다. 더욱이 이 계획은 교토의정서 및 유럽의무공유협약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정부의 1999년 정책성명서의 “새로운 발전시설은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에도 부합되었다.

핀란드 산업계의 전략적 입장은 기타 관계자들이 수용하고 조정하기 쉬운 최소한의 4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 에너지 계획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간주되었다. 산업계가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정부 및 의회의 지지를 유도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훌륭한 정치 감각

- 2) 환경보호를 지지하는 훌륭한 생태적 감각
- 3)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기를 거부하는 훌륭한 판단력
- 4)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원자력과 바이오에너지를 함께 이용하
는데 합리적인 훌륭한 비즈니스 감각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해관계자들이 원자력의 역할을 에너지 믹스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점이며, 에너지 믹스는 앞서 언급된 훌륭한 감각에 의거해야 하며, 부분으로 오인되거나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점은 이것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단순한 권고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의 명료한 동의를 통한 다양한 에너지 믹스로 “훌륭한 감각”에 기반하는 수용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정책 수단인 “원칙적 의사결정”은 원전시설의 역할에 관한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전략도구이다. 이것은 해당 프로젝트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단계적 의사결정 수단이다. 이것은 매우 숭고한 가치로, 정치적 입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정부 또는 의회가 특정한 에너지시설 건설을 결정하는 것과 그 프로젝트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음을 판단하는 것 사이에는 매우 큰 상징적 차이가 있다. 새로운 시설과 사회복지를 결합하는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바람직한 개념에 부합된다. TVO에 따르면, 지금까지 훌륭하게 운영된 핀란드 원자력산업에 대한 신뢰에 힘입어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사회의 의사결정 참여로 인해 종식되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신형 원자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최종 결정이 단순한 정당간의 협의나 고도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또는 불완전한 에너지 예측과 같은 빈약한 근거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감각적인 에너지 비전을 가지고 사회 내 소통을 시도한 핀란드의 이해관계자들은 신형 원자로에 대해 정치대표자들의 다수 합의를 도출했고, 일반 시민들 역시 이 같은 결정을 수용했다. TVO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공개되어야한다”고 평하고 있다.

벨기에: “AMPERE”

벨고누클리어(Belgonucléaire)에서 일하는 한 컨설턴트의 보고서

정부 정책에 따라 1999년 4월 대다수가 대학교수인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AMPERE(Commission to Analyse the Production Modes of Electricity and the Redeployment of Energies: 전기생산방식 및 에너지 전환 분석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미래의 전력생산 방식을 제안하고 이용 가능한 기술을 평가하여 대중에게 주요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99년 7월 벨기에 신정부는 원래 계획했던 원전시설의 가동기간이 지나면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임 국무장관은 원자력의 폐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해안에 풍력발전 지역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국무장관은 재생에너지의 효과가 다소 과대평가되었다고 결론지은 보고서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AMPERE는 정부의 요청대로 국제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했지만, 의사결정 절차에서 그 결과를 대중과 커뮤니케이션하지는 못했다. 검토결과는 의회의 고위 단계에서만 논의되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과학적 역할과 객관적 분석 사실을 확

인했지만 정치권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벨기에의 두 번째 사례는 의사결정자들이 원자력을 폐기할 것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논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권의 의사결정은 과학적인 조언이나 폭넓은 대중의 참여 없이 행해졌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보고서는 오로지 정치적 측면을 고려한 의사결정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벨기에: “단계적 폐기” 논의 일렉트라벨(Electrabel)의 보고서

벨기에 하원 및 상원은 원전시설의 예정된 가동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기할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 원자로의 건설을 금지하지만, “불가항력적” 상황은 기존 원전시설의 가동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원자력의 폐기를 찬성 및 반대하는 두 집단이 나타났다. 찬성하는 집단의 핵심 인물은 에너지 및 개발부 장관으로 과거에 벨기에 그린피스의 의장직을 맡은 바 있었는데, 이러한 과거의 직위 때문에 장관의 맡은 바 책임 및 임무가 실패할 것이 확실해 보였다.

폐기에 찬성하는 측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는 정부 내 녹색당의 주요 의도를 관철시키고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의회의 최고 단계 즉, 상원에서의 의사결정 절차에만 약 4년이 걸렸다.

관련 정보는 AMPERE 위원회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제한되었고 어떤 대중적 참여도 정부 주도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자력 반대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원자력은 “구식” 기술이고, 다른 대체에너지원이 전력생산을 대신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도 미결상태이고, 후유증이 치명적이며, 핵무기 확산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등이었다.

원자력 폐기에 반대하며 대중을 납득시키려는 측은 2015년부터 원전시설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정당화할만한 기술적, 생태적, 경제적 근거가 없고, 원자력이 에너지 가격을 낮게 지속함으로써 벨기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교토의정서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을 대신할 대규모 대체에너지가 없다는 점 등을 든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목표 대상은 원자력 반대자들 및 매스미디어를 통한 일반 대중,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다.

녹색당과 언론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소통의 부재는 대중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벨기에 정계(녹색당을 제외한)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원자력에 찬성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치관계자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논의

핀란드에 비해 벨기에의 사례는 대중의 참여가 전적으로 부족했음을 보

여준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핀란드에서는 원전 증설을 지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화가 정치권의 승인을 이끌어냈지만 벨기에의 경우에는 정당의 관심사 부문에서만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례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반영구적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벨기에의 경우 공개적인 대중 토론이 원자력 찬성 목표를 실현할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장기적인 대화의 부재는 정치가들이 최종 결정을 독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 원자력 분야의 모든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원전시설 프로그램이든 적절히 실행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치 환경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대중에게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원자력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원자력 관련 기관과의 조화된 커뮤니케이션에 달려 있다.

벨기에: “국가의 지속가능 개발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SCK-CEN의 보고서

벨기에 정부는 법적 필요에 따라 정부 산하 조직인 SD(Interdepartment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부처간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를 통해 에너지정책, 수자원, 교육, 기술이전, 성관련문제, 교통 등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다루는 정부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반 대중에게 계획 초안이 공개되었다. 벨기에로서는 이처

럼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중과의 협의를 추구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총 1,887건(개인 1,540, “이익집단” 347)의 유효의견이 접수되었고 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15,750건의 논평이 따랐다. 대다수는 언론매체를 통해 계획안에 대해 알게 되었다.

논의

OECD NEA의 2002년 데스크스터디, “원자력과 사회: 신뢰를 부르는 성공적인 소통법(Society and Nuclear Energ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은 의사결정에서의 대중 참여를 7단계로 구분한다. 벨기에의 사례는 “리스크 평가 및 솔루션 제안에 대한 대중 참여”를 반영하여 최상위단계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본 보고서의 제5장 참조). 광범위한 참여자 및 대중의 의견을 듣는 등의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는 높은 수준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전제조건이다. 의견 및 논평의 수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전반적인 목적은 의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것이며, 2004년의 수정안은 미래에 대한 국가의 비전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국가 원자력 정책 및 폐기물 임시저장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NMC(Nuclear Management Company)의 보고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2개의 프로젝트가 보고되었다. 첫 번째는 유카산 영구처분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제공 및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둘째는 아이오와주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듀안아놀드에너지센

터(Duane Arnold Energy Center)의 사용후핵연료시설 프로젝트의 건설 및 활성화에 관한 것이었다.

두 사례에 대한 접근방식은 유사했다. 먼저 담당공무원 및 다른 주요 이해관계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언론에 정보를 제공했다. 노동조합 역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권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논의

대개의 경우 원자력산업에 관한 세상의 이해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는 오피니언 리더나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전환할 수 있다. 단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가동상황을 직접 소개하거나 원자력 시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혜택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뒤바꿀 수 있다.

❧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

헝가리: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원전 운영기업 팩스의 보고서

1992년 사용후핵연료의 원 생산자인 과거 소비에트 연방으로의 운송이 중단되자 원전시설 운영사인 팩스는 현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대책을 찾아야 했다. 팩스는 사용후핵연료 임시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에게 이 시설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발전소 주변 반경 12킬로미터 이내의 13개 주거지역을 포함한 TEIT(Social Control and Information Association: 시민 통제 및 정보협회, 헝가리어)라는 시민단체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시설의 안전 및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시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57%의 동의를 얻어 건설되었다.

논의

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장점은 시민단체가 꾸준히 존속하며 대중과의 대화에 협조함으로써 파스의 원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스페인: “트릴료-임시저장시설”

스페인 원자력산업포럼이 작성한 보고서

스페인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위한 집중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트릴료(Trillo) 원자력발전소는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2002년이 되기 전에 저장용량을 증대시켜야했다.

ENRESA는 1995년 8월 규제허가 취득절차에 착수했으나 사용후핵연료 건식임시저장시설은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한 특성과 서로 상반된 입장의 이해관계자들의 개입 때문에 2000년에 이르러서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는 대중에게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시설의 필요

성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논의

원전시설 건설의 경우 기간 내에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지지가 필요하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는 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원전시설의 장기간 폐쇄 이후 재가동

캐나다: “피커링-에이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온타리오(Ontario)발전소의 리포트

1997년 피커링 원자력발전소에서 중요한 원자력 개선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시설 재가동 및 원자로 운영허가의 연장과 관련된 환경평가 결과 및 권고사항을 조사하기위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육,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방적이고 사전적인 커뮤니케이션, 협조적인 시민의식 등을 통해 피커링에이의 안전에 관한 대중의 선입견과 오해 및 우려를 없애는 것이었다. 새로운 운영진이 구조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했고, 시설종사자들은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1년, 결국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힘입어 원자력에 대한 찬성률은 72%까지 증가했다.

논의

대중의 신뢰는 사전적인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및 대화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는 균형 있고 일관된 특성이 필요하다.

일본

사회경제연구센터의 전력산업중앙연구소가 작성한 리포트

일본에서 원자력과 커뮤니티 간의 교류 및 대화의 필요성은 1990년에 발생한 심각한 안전상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1995년 나트륨 유출사고 이후 원전시설이 있는 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상에게 직접 원자력 문제에 관한 대중 토론을 건의했다. 원자력위원회는 이 기회를 이용해 “국가적 합의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성명을 발표하고자 했다. 2가지 조치가 실현되어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원자력 관련업계 외 비전문가들이 사회를 맡은 “원자력 토론회”가 개최되어 중요한 의견들이 표명되었다.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일부 대중의 조언이 적용된 반면 원전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의 지지와 확신(국민투표 및 여론조사에 의해 측정된)은 향상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프로세스 뿐 아니라 토카이 마을의 JCO(일본의 원전연료회사) 사고 전후에 관련되어 있던 이들에 관해 기술한다. 원전시설을 재가동하기 전 한 지역에서는 JNC에게 위기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기술적 리스크에 관한 지역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을과 JNC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 원자력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돕는 것이었다.

논의

본 보고서는 교훈보다도 지속적인 발견 과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가 지역사회 의의 결정뿐만 아니라 지역당국과 행정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

∞ 안전 및 보안 ∞

스페인: “아세리눅스 사례”

스페인 원자력산업포럼의 리포트

1998년 스페인 로스바리오스(Los Barrios)의 아세리눅스제철소에서 Cs-137(세슘 137) 방사선원을 포함하고 있는 고철이 용해되었다. 이로 인한 오염 결과가 제철소에 의해 통보되자 CSN(Nuclear Safety Council: 원자력안전위원회)이 조사에 착수했다. 스페인의 대기방사능 측정소에는 어떤 비정상적인 유출도 탐지되지 않았다(이 측정소의 한계수준은 대중의 건강을 위협하리라 판단되는 수준에 맞추어져있다). 그러나 CSN은 Cs-137이 프랑스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도 탐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언론은 CSN가 무능하며 방사능 탐지 시점 및 방식에 관한 허위정보를 배포했다고 떠들었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1998년 6월과 7월에 가장 두드러진 환경 뉴스로 부각되었으며, 국가 기관은 이에 대응해 대중을 대상으로 사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다.

이 사례는 방사능 위험물질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EU의 새로운 법령 제정을 촉구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의 방지 및 관리와 관련해 EU 회원

국들 간의 각기 다른 관례를 일치시키기에 이르렀다. EU 집행위원회는 COM(2002)0130, 즉 “방사능 위험물질의 통제에 관한 명령위원회를 위한 제안”을 제의했다.

논의

이 사건으로 원자력전문가들은 원자력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사건을 전달할 때에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할 것인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신뢰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대중에게 설명해야 할 문제가 전문적일수록 대상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스페인: “후스바도 연료시설의 빗물유입”

스페인 원자력산업포럼의 리포트

1998년 9월 21일 후스바도의 핵연료 제조공장이 폭우로 침수되었다. 공장의 비상사태 관리자는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해 비상 대응 및 방재대책에 착수했다. 그는 국가 원자력안전 감시기관 및 시민보호기구에 통보함으로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했다. 이와 같은 신속한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논의

이 사건의 주요 메시지는 올바르게 정의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고도로 조율된 공식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대중과의 객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하고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페인: “환경운동가들의 소리따 원자력발전소 침입”

스페인 원자력산업포럼의 리포트

2002년 10월 스페인의 산업자원부 장관은 두 번째 운영허가 연장을 통해 소리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2006년까지 승인했다. 2003년 4월 25일 한 무리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발전소 경비구역에 무단 침입했다. 6명의 환경운동가들이 발전소 건물에 올라가 시설 폐쇄 및 스페인 내 원자력 폐기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치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미흡한 시설보호 조치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를 가했다.

이 원자력발전소 습격사건은 모든 언론들의 대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논의

이 사건으로 시설운영자들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언론은 일단 특이하고 극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재빨리 다루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 신속하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원전시설 운영자들은 이러한 뜻밖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대비할줄 알아야 한다.



03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협회의 포괄적 측면과 국가별 사례

보는 바와 같이 각 사례의 전후사정 및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커뮤니케이션 사례의 단순한 분석이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지만 명백한 메시지를 강조할 수는 있다.

∞ 포괄적 관찰과 명백한 메시지 ∞

원자력은 많은 국가의 에너지 믹스에서 필수적 요소로 고려된다

사례 연구는 온실효과의 원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토 의정서에 따라 에너지 믹스와 온실가스 감

축은 오늘날 많은 국가들의 정책적 관심사가 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은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고의로 이를 배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원자력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덜 미치는 대책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판단은 매우 달라진다.

원자력에 찬성하는 입장은 원자력을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전력가격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인다. 원자력 사용은 또한 전력의 수입의존도(일부의 경우에는 단독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원자력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원자력산업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다양한 상황과 의사결정 방식이 사례 보고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례는 원자력산업 관계자들이 원자력시설의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취할 조치를 고안해야 함을 다루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가적 심의에는 기술전문가들과 경제관계자들이 관여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정치권의 몫이다. 녹색당 또한 이 커다란 그림의 일부다. 국가는 원자력 폐기를 목표로 하는 단체들과 대립이 있을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

사례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들은 대개 허가 및 의사결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환경평가 및 다른 관습적인 계획과 부지사용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수많은 필요조건이 따른다.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형적으로 일부 수단들(브로셔, 공청회 등)이 사용되지

만, 사례 보고는 매우 다양한 계획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가정책 사례 보고서는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정치권의 주요 결정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을 강조한다. 이런 영향력은 사회적 파트너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상황을 지원하거나 고위 정치당국과 특정 관심사 사이에 특권 관계가 형성될 때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민단체는 언론이나 브로셔, 웹사이트 같은 정보수단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지역사회의 동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활동을 활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의사결정 단계에 도달하기 전 지역 사회의 명백한 인가가 필요하기도 하다. 몇몇 국가들(핀란드, 헝가리, 일본, 스페인)에서는 이들이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지자는 해당지역 당국의 의사결정권자를 만족시켜야 하며 나아가 정치권의 승인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식 및 지지를 획득해야한다. 지역당국의 인가가 필요 없을 때도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언론 및 호기심 많은 질문자들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좋은 관례로 여겨진다.

재가동 사례 보고서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시설 인근 주민 및 지역 의회 대표의 동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시설의 전체 조직에 영향을 주고, 시설 종사자들이 의사전달자로 행동할 수 있다. 다른 보고서들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하고 신뢰할만한 인물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도구로서 노동조합의 개입을 피력하고 있다.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사례는 위기 상황을 묘사하는데, 원자력 관계자들이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능동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확대되면 당국자나 조직의 대응 또한 마찬가지로 “확대”되어야한다.

모든 사례 보고서는 언론이 주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원자력 관련사건 및 의사결정은 그 본질에 상관없이 언론의 지대한 관심(대부분은 부정적인)을 일으키며, 이 같은 관심은 주로 단기간에 집중된다. 어떤 사례에서는 원자력에 반대하는 이들에 앞서 언론매체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는 국가차원의 토론이 수개월간 유지되고 모든 찬반 논쟁이 보도된다면 언론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핀란드에서는 신형 원자로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점차 감소하고 1년 후 선거토론에서는 원자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도 않았다.

원자력 반대자들은 정보 및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거나 언론이 주목할 사건을 일으켜 “현장을 접거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다. 원자력 지지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회구성원들은 그로 인한 영향에 대비하거나 또는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 이 사례들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소통하고 이를 옹호할 때 보다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원자력 세계 “개방”을 향한 뚜렷한 움직임

사례 보고서들은 원전시설이 “출입금지구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부이며, 사회에 점진적으로 개방될 것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원자력에 관한 의사결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져왔다. 그런 맥락에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은 일 년 또는 수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신적인 노력과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시설의 개방 정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 방문센터와 정기간행물 등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원전 시설이 개방된다.
- ⌘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방문 및 견학이 많이 이용된다.
- ⌘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개방이 더욱 확대적으로 이루어진다. 헝가리, 일본, 캐나다의 경우 정보제공보다 지원활동의 비중이 더 크며 지역관계자들이 원자력에 대한 지식 및 의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 ⌘ 원자력시설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이웃주민들 및 시민들 그리고 로비활동을 통한 의사결정권자들과 그들의 업무세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동원된다.
- ⌘ 퇴직한 종사자 및 전문 단체(핀란드의 “원자력청년단체”, 헝가리의 “원자력여성단체 등”)들을 동원해 다른 세대 또는 인구집단에 다가간다.
-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각 가정에 다가간다. 각 가정의 우편함에 신규시설뿐 아니라 전체 의사결정 절차 그리고 의견을 표현할 방법에 대한 서면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절차가 완성되면 상세한 결과를 제공받는다.
- ⌘ 일부 원전시설에는 지역감시위원회 형태의 영구적인 상호 커뮤니케이션 기관이 있다.
- ⌘ 원자력 관련 관계자가 자신의 역할을 사회의 주요구성원으로 간주하고 활발한 정보공유 책임을 맡을 때 투명성은 더욱 증가한다. 캐나다에서 피커링에이사가 지역 공무원들에게 실

시간으로 안전성보고를 제공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개방 정도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안전문화에 점진적인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의) 현장 관리자들과 (일본의) 규제기관은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비즈니스적 의사결정”으로 묘사되며, 그 목표는 원전시설 가동이 허가되어 경쟁력있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우호적인” 태도를 통해 원전시설 운영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유도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하거나, 이보다 중요한 신뢰와 지지, 승낙을 얻을 수도 있다.

단순히 시설만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동시에 원자력의 혜택 및 위험성이 정책 결정 단계 및 언론 등지에서 폭넓게 토론되고, 적극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다양한 의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제시된다.

그러나 이처럼 적극적인 노력과 대중 포럼의 원자력관련 토론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원자력 문제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국가 또는 사례별 특징 ∞

국가 또는 사례별로 다양한 특성이 구분된다.

공간적 특성 및 규모

⌘ 국토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 대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

도가 높은 국가

- ⌘ 원전시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농촌 대 도시)
- ⌘ 원자력에 대한 국가의 에너지 의존도
 - ⇒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
 - ⇒ 공급자의 숫자

핀란드는 기존시설 지역(올킬루오토 및 로비사)에 2개의 신규 원자로 증설을 계획했다. 만일 지역사회의 반대로 한 후보지역이 탈락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 지역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았다. 만약 두 지역 모두 수용에 찬성한다면 원자력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입법 또는 의사결정 방식

- ⌘ 연방식 의사결정구도 대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
- ⌘ 검증된 전문가에 의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표현 수단
- ⌘ 적극적인 참여에 관한 대중의 참여 절차

핀란드의 “원칙적 의사결정”은 폭넓은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편향된 견해를 넘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책 개요

- ⌘ 통합된 에너지정책,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
- ⌘ 친환경적 에너지원 홍보

- ⌘ 조세제도, 조세지원 정책
- ⌘ 방사성폐기물 관리 능력 입증

역할 및 책임

- ⌘ 누가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 인가를 요구하는가? 그것을 취득한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인가? 그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가?
- ⌘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의존도
- ⌘ 협력 또는 적대적 관계
- ⌘ 계층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거부 권한, 의사결정 과정 등)
- ⌘ 어떤 정부 기관이 원자력 분야를 관장하는가“
- ⌘ 원자력 이해관계자들의 시장조건(황금주)
- ⌘ 원자력 지지 기관의 지원 참여, 네트워킹
-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 커뮤니케이션 경로 확장에서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
- ⌘ 토론의 규모: 참여자의 수, 토론 기간, 전후관계
- ⌘ 지역 감시 단체의 존재 여부, 지위, 활동상황

사례 보고에 나타난 다양한 역할 및 책임에 따르면 원자력 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옹호할 다양한 계획을 선택해야한다. 협의나 강력한 형태의 대화 또는 공동의사결정보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흔히 사용되는 듯 보인다.

헝가리 파스 원자력발전소의 역할(국가의 필수적 공익기업이 필수 시설

에 대한 인허가를 얻는 유일하고 완전한 책임을 보유한다)과 핀란드의 상황(동일한 경제적 관심 및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의 강력한 산업계 네트워크가 국가의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을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혜택 및 리스크와 안전 문화 개발

- ⌘ 관련 결정 및 결과에 관한, 그리고 일반 대중의 교양 및 지식 정도
- ⌘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지식을 창출하고 혜택 및 리스크와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이끌어내는 전문가 또는 의사결정권자의 목표
- ⌘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부담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에너지청구서 부착



04

원자력의 다양한 혜택 및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전문가, 사회의 인식: 특정 관심사 및 견해차

사례 보고서는 원자력 이슈와 관련된 토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광범위한 혜택 및 리스크에 대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력의 혜택 및 리스크의 요약 후에는 다양한 계층의 관계자들이 표출한 우려와 관심사를 검토하고 그 차이점을 조명한다.

∞ 원자력 또는 특정 시설과 관련된 혜택 인식 ∞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교토의정서의 의의(이산화탄소 배출 방지)

⇒ 환경에 무해한 에너지 생산

- ⌘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 ⇒ 가격 및 공급의 안정
 - ⇒ 국가의 에너지 자급자족 및 에너지 공급 보장
 - ⇒ 가장 경제성 높은 기술, 원자력 중단 및 폐기물 관리비용 계산
 - ⇒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생산량 선택
- ⌘ 산업계 및 시설유치 지역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삶의 질에 주는 영향
 - ⇒ 산업적으로 유익한 생산
 - ⇒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되는 고용증대
 - ⇒ 지역의 조세수입 증대와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 ⇒ 복지국가 유지

❧ 원자력 또는 특정 시설에 대한 리스크 인식 ❧

- ⌘ 안전 및 보안
 - ⇒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위험
 - ⇒ 운영조직 측면에서의 원자로의 안전성(안전에 대한 사고방식)
 - ⇒ 시설근로자 및 일반대중에게 노출된 방사능 위험
 - ⇒ 테러 공격에 대한 취약성
 - ⇒ 핵무기 확산 위험
- ⌘ 의사결정 결과
 - ⇒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에 미치는 악영향
 - ⇒ 최종 처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조치(임시

저장)

⇒ 원전시설 및 원자력산업에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임시저장 문제(몇몇 사례에서 이런 위험 및 약점을 명확히 인식한 점을 주목할 것, 이는 “해결책이 있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자들의 일반적인 주장과 상반된다.)

⌘ 지역에 미치는 영향

⇒ 냉각수 배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교통량 증가

⇒ 낙인효과

⇒ 트로이목마 효과(임시저장이 영구 저장에 되거나 국가 또는 국제적인 저장 처리 시설로 쇠락)

⇒ 불공평: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 멀리 떨어진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리스크

⌘ 원자력 프로젝트의 비실천과 관련된 리스크

⇒ 경제적인 전력공급 기회 상실

⇒ 대규모의 직, 간접적인 고용기회 상실

⌘ 부정적인 여론 자체가 원전 운영에 리스크로 작용

☞ 관심사 및 견해차의 특징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표현한 주요 관심사와 각 부류 간의 현저한 차이가 사례별로 발견된다.

국가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 - 핀란드 -

의사결정권자들은 환경정책과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다.

지지자들은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전력공급에 관심이 있다.

시민단체는 사고의 위험성을 염려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높은 신뢰와 확신을 표현한다.

그러나 사례 보고서는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의 주요 관심사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는 충분한 공급은 사회의 주요관심사가 아니다. 원자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적대적 관점 때문이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현대의 저에너지 사용 사회로의 이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원전시설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벨기에 -

의사결정권자들은 환경보호정책을 펴는 정부가 원자력 폐기를 완수할지의 여부와 원자력 관련 쟁점과 상충하는 정당간의 대립에 관심을 갖는다.

지지자들은 원자력이 폐기될 경우 국가의 경제적인 경쟁력과 의사결정 절차에서의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원자력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보에 대한 사회의 요구 즉 관계당국이 대중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이 실패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시민단체는 원자력 폐기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의 극히 낮은 관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간의 견해차는 다음과 같다.

- ⌘ 감정에 호소한다. 확신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 ⌘ 대중이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믿는다.
- ⌘ 지지자들의 경우 시야가 부족하여 공통적인 전략을 갖추지 못해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 ⌘ “정치학은 분명 다른 게임의 법칙을 따른다.”

- 미국 -

의사결정권자들은 원자력산업이 국가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있다.

지지자들은 일반 대중이 반원자력 단체에 의해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및 원자력산업의 경제성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얻게 될 것을 우려한다.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사이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다.

- ⌘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대중의 제한된 지식
- ⌘ 때로 지지자에 앞서 반원자력 단체들이 시민사회에 접근할 수 있다.

㉞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 ㉞ - 헝가리 -

의사결정권자들은 기간, 비용 요인,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리스크에 대한 보상과 지역의 원전 감시, 원자력 이슈에 대한 지역의 지식향상에 흥미가 있다.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발전소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소진되어 원자로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과 원자력 엔지니어들이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반원자력단체가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새로운 폐기물 처분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초래할 추가적인 위험을 우려한다.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간의 견해차는 다음과 같다.

- ⌘ 원자력 관련 문제에 대한 대중의 낮은 지식수준
- ⌘ 논리적 주장은 감정에 대항하기에 비효과적이다.

- 스페인 -

지지자들은 의사결정 절차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분담과 의사결정 절차의 효과에 대해 관심이 있다.

시민단체는 스페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집중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간의 견해차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정도와 환경적 영향, 시설의 향후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원전시설의 장기간 폐쇄 이후 재가동

- 캐나다 -

의사결정권자들은 발전소의 안전, 보안, 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신뢰성, 불분명한 정보 등에 관심이 있다.

지지자들은 재가동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기회의 상실로 인해 주변지역의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속될 것을 우려한다. 시민단체는 믿을 수 있는 시설관리자의 부재와 발전소의 안전과 보안 문제에 대해 염려한다.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간의 견해차는 다음과 같다.

- ⌘ 과거의 불투명성과 빈약하고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기인한, 발전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여론
- ⌘ 반원자력단체들이 유포하는 부정적 혹은 그릇된 정보로 인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우려

- 일본 -

의사결정권자들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및 지역주민과 원자력 산업계가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 지지자들은 원자력 관련 계획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며, 지역주민과 의사결정권자들이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공생할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시민단체는 토카이 원전시설의 안전과 경제적 생계수단과 관련된 위험시설의 심리적 용인에 관심이 있다.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간의 주요 견해차는 원자력 문제와 관련된 “금기

(taboo)”의 존재에 있다.

∞ 안전 및 보안 ∞

- 스페인 -

지지자들은 아세리녹스 사건에 관한 오해가 확산될까 우려하며, 불공정한 전술에 맞서 그들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응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

시민단체는 방사능사고(아세리녹스)에 관한 정보부족과 원전시설(소리따)의 보안에 관해 우려한다.

지지자들과 시민단체 간의 견해차는 다음과 같다.

- ⌘ 방사능 유출의 원인에 대한 정보부족(아세리녹스)
- ⌘ “최초의 메시지가 가장 빨리 퍼진다(소리따).”
- ⌘ 사건 초기 단계에 원전시설 관계자 중 누구도 커뮤니케이션 책임을 맡지 않았다.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익사업 차원에서 설정되었다(소리따).



05 커뮤니케이션 참여방식

‘원자력과 사회’ 사례연구에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대화, 참여 등과 같은 다채로운 상황이 나타난다. 아래에 제시된 분석을 통해 분명해지겠지만 이런 개념은 다양한 맥락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부 커뮤니케이션들은 법적 필요에 의해 시행되고, 그 밖에도 공식적인 범주 밖에서 정보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원자력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때때로 유사한 전략과 접근방법을 이용한다.

‘원자력과 사회’ 데스크스터디(OECD NEA, 2002 p.81)는 “대중 참여 단계(public participation ladder)”를 인용하며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대중의 알 권리”² 라고 했다. 윗 단계(여전히 제한적이긴 하지만)에는 공적

2. 모두는 아니지만 사례리포트를 제출한 대부분의 국가는 “정보의 자유”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

정보와 대중의 반대할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그 위 단계는 “관심사, 행위자, 안전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이며 “리스크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대중의 참여”가 이어진다. 가장 상위단계는 “대중의 최종결정 참여”이다.

오늘날에는 의사결정 기여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특히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에서 두드러진다. 분석가들은 정책 의사결정이 대중의 참여로 인해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데스크스터디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대중의 참여 단계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인지는 각 국가의 입법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적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례는 높은 단계의 참여 방식을 기술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례들은 정보제공 및 지원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와 대중들이 관심주제를 정하고 나아가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계획들은 의사결정 절차를 돕기는 하지만 참여적인 의사결정의 예는 아니다. 보다 긴밀한 참여가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가 모든 사례에서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보고된 사례에 일부 훌륭한 점이 눈에 띄긴 하지만, 원자력 관련 기관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의미 있는” 대화 또는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일반화된 규칙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사례 보고서를 통해 여러 접근방식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고려해야 할 점들도 발견할 수 있다.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가 의사결정 절차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를 다룬 5개 사례는 커뮤니케이션 및 대중의 참여

에 대한 각기 다른 형태, 단계, 필요조건 등을 보여준다.

벨기에의 AMPERE 보고서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제안을 만들기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한 내용을 다룬다.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된 16인의 과학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미래의 전력생산 기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데이터 및 분석자료”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40년 내에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려는 1999년 신정부의 조치로서 이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임무는 벨기에 국민에게 연구결과를 알리고 특히 산업 및 경제계의 주요관계자들이 견해를 피력할 수 있게 사실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AMPERE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선택에 관한 의견을 수집했다. 주로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또한 여러 산업 및 재계 대표들로부터 성명서를 받았다. 위원회의 이런 활동은 전문가들과 다양한 에너지 자원 지지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다. 전문가 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원자력에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원자력이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원임을 확인했다.

위원회 활동의 다음 단계는 다양한 의사결정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에너지 선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의회와 거의 모든 정치단체에 제시되었고, 보고서는 관련 대학 및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AMPERE의 보고서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공개되고 과학전문지 및 신문에 실렸다. 이런 정보공개 활동이 “홍보용”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이 점에서 홍보의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내용 및 그 결론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환경운

동 단체에 의해 인터넷에 전파되었다. 그린피스는 독일의 한 대학이 발표한 위원회의 권장사항과 상반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비공식적이고 불완전한 영어로 오역된 위원회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 리포트는 위원회의 세부적인 추론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AMPERE 위원회는 벨기에 국민들에게 그들의 결론을 알릴 임무를 진지하게 수행했다. 그들은 대학 강의와 더불어 오피니언 리더와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16-18세의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사례 보고서에는 전문가들이 강연이나 공청회에 참여할 것을 자주 요청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있다. 이는 교육적인 맥락에서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에너지 선택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은 일상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및 에너지 선택에 대한 의견을 변화시키려면 장기간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그들은 이 활동을 시민 본연의 당연한 역할로 간주했다. 따라서 AMPERE의 사례는 사실 발견 및 연구에서 시작해 시민교육으로 발전한 흥미진진한 진전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결론이 집권당의 의도와 달랐기 때문에 이는 원자력폐기에 관한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되지 않았고, 국가정책 의사결정 절차의 한 부분으로 벨기에 사회에 전파되는 데에도 아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새로운 원자로 건설에 관한 핀란드의 사례는 지지자들이 실행한 여러 예를 기술한다. 여기에는 국가적 필요조건(환경영향평가와 원칙적 의사결정의 입법)에 따라 시설운영업체가 시행한 홍보 및 협의 노력과 경제계 대표들이 전국에 걸쳐 시행한 고강도의 정보캠페인 등이 있다.

홍보 및 협의는 고전적 방식으로 행해진 듯하다. 일정한 지역 내의 모든

가구에 브로셔가 전달되었고 공청회가 개최되어 그 결과가 관계당국과 대중 모두에게 전달 되었다. 이 과정은 원자력을 지지하는 공익사업체가 주로 수행했으며 웹사이트와 지역정보센터를 통해 보완되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브로셔와 공청회가 EIA 절차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이다. 전력회사가 설문을 시행해 새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욕구, 인식, 희망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우리는 교통량 증가문제에 대한 언급 이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설문에 응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알지 못한다. 설문과 공청회의 목적은 EIA 리포트가 작성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과 우려하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 관계당국이 승인한 후 이 리포트들은 요약돼 각 가정에 배포됐고 두 번째 공청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원칙적 의사결정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통상산업부 장관은 새 원자로 계획을 승인했고 TVO가 작성한 새 원자로에 대한 설명서가 2개 후보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다시 배포되었다. 통상산업부가 주관하는 공청회도 계획되었다. 가장 먼저 정보를 제공할 대상은 지역 시의회였는데 이는 정부가 원칙적 의사결정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의회가 새 원전시설 건설을 허가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일은 성실하게 실행되었지만 원칙적으로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또 다른 지지 활동(산업연맹 및 다른 경제 단체들의 활발한 로비활동 및 토론)은 그 성격이 달랐다. 이는 대중들에게 산업계 및 노동계가 새로운 원자로를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전면적 노력이었다. 자비를 들어가며 수행한 이 활동은 법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제 관계자들의 확신 및 원자력 생산자들과의 결속을 보여주었다.

의회 분과위원회가 주관한 특별히 확대된 공청회 프로세스에서는 법적 필요에 따른 활동과 로비활동이 병행되었다. 많은 관계자들과 전문가 그리고 비정부단체(NGO)들이 원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직접” 접근했다.

미국의 “유카 커뮤니케이션” 사례는 원자력 관련기관이 국가 의사결정 절차에 적용한 로비활동 및 마케팅의 일례지만, 법적 필요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아이오와의 원전관리자들은 유카 산 연방 처분 프로젝트와 관련해 “의회의 찬성 표결에 영향을 미칠” 시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반대 결정은 원자력산업에, 그리고 결국 우리의 원전시설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경영진 및 직원들은 아이오와주 의회대표단을 만나 브리핑 기회를 갖고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그들은 또한 언론과 접촉해 저널리스트 및 편집자들과 교류하고 지역 신문에 통신문 및 논평을 기고했다.

이 사례에서 국가 의사결정 절차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 즉, 표결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참여”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행하는 것이다.

정치적 의사결정권자에 집중하는 이 정보제공 전략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아마도 이는 두 가지 보완적 요인에 기인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능숙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원자력 자원의 가치 및 안전성을 옹호했다. 또한 의회 대표들은 유권자들과의 대화 및 토론을 준비하기보다 강력한 확신을 가진 경제관계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익숙했을 것이다.

벨기에의 원자력 폐기 결정 사례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비록 정치적 맥락이 아주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정치권의 의사결정은 대중

의 참여 및 토론에 우선한다. 정치 관계자들(연방정부의 녹색당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환경운동가들)은 단기간에 원자력 폐기 찬성표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과 정부 및 의회 구성원들에게 전면적인 정보제공 캠페인에 착수했다. 그들은 광범위한 대중토론을 시행하지 않았고 AMPERE 위원회가 개발한 신뢰도높은 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았다. AMPERE가 원자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산업계 등의 원자력 폐기 반대자들은 연합된 대응을 보이지도 않았고(핀란드와는 대조적으로) 따라서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원자력 지지자들은 언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선출된 대표들의 강력한 지원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여기서는 흥미로운 반전을 볼 수 있다. 원자력 지지자들(과거에 전형적으로 여론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은 부류)은 정부가 대중의 참여 및 토론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비난한다. 녹색당 각료는 과거 관료주의 시대에 볼 수 있었던 냉담하고 독재적인 방식을 이용한다. 보통 이런 갈등 속에서 대중의 직접적인 참여가 의사결정을 동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약자의 행동이다. 이 사례는 정치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의사결정 절차의 중심에 놓여있는 권력의 행사를 강조한다.

벨기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보고서는 이와 흥미롭게 대조된다. 각 진영이 결정적인 요소를 선점하려고 하기보다 대중과의 직접 협의를 이용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원한 시민들은 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 시행뿐 아니라 정책안 작성에 필요한 정밀하고 상세한 의견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 등의 첨단기기와 기관의 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협의 과정을 준비했음에도, 이 계획은 최종단계에서 결국 실패했다. 대중의 의견을 분석하고 통합해 피드백할 인적·물적 자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은 이 정책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국가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5개의 보고서는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관해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 권력은 사실적 분석에 상반된다. 할지라도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권력은 정보의 객관적 가치보다 그 순수한 중요성을 중시한다. 또한 자신의 정보 또는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승리할 기회를 갖게 된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집단은 그들의 견해가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보다 많은 대중의 참여를 요구한다.

누가 개입하든 노골적인 권력 사용은 상대의 분노를 유발한다. 벨기에의 원자력 폐기 지지자들이 이용한 정보 전략과 장관이 대중의 토론 참여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과거에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비공개로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공정해 보인다.

원자력 폐기 관련 토론을 분석할 때, 벨기에의 원자력산업계는 밀접한 네트워크를 통한 사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했다. 벨기에 정치가들은 이에 따라 행동했다. 녹색당 의원들이 원자력 폐기를 한결 같이 고수했다면 다른 정치가들은 향후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표결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동의했다. 이런 종류의 협력 네트워크와 같은 유사한 상황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다양한 산업계가 단합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경우이다.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사례는 권력이 내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녹색당 각료는 원자력의 단계적 폐기에 대한 입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원자력에 찬성하는 AMPERE의 결론은 근본적으로 무시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이런 상황을 조정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필요성이

발견된다면'이라는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원자력 사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고 따라서 벨기에 의회의 원자력 폐기 결정은 지지자들이 원했던 만큼 급진전되지는 않았다. 신형 원자로에 찬성하는 산업계의 강력한 주장 또한 신형 원자로가 미래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다는 점을 의회 전체에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의회의 원칙적 의사결정은 적은 표차로 가결되었다. 두 경우 모두 민주적 절차가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정당 연합을 하더라도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2개의 국가 정책 의사결정은 완전한 만장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양한 견해를 표현하고 고찰하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전체주의적 결정의 방어수단이다. 민주주의적 절차는 완벽하게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국가 의사결정 절차 사례에는 의사결정이 대중과 함께 이뤄지는 참여적 방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원자력정책 수립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민주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훌륭한 통치방식³은 정보 기반을 확장하고 의사결정권자들 및 대중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정보기반이 넓고 공개적이면 에너지 같은 중요한 정책을 권력행위만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대중 토론을 다룬 벨기에의 보고서는 특별한 교훈을 준다. 이 사례는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민들은 정책결정 참여에 관심이 있고 또한 이를 제공할 능력이 있다. 이 사례는 정보와 정책반영에 보다 많

3. '원자력과 사회' 데스크스터디는 훌륭한 통치를 "대중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토대로 설계된 정책"으로 정의한다(p.35).

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견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의 조언을 확보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원이 소비되고 필요한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정책입안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중의 참여 방식은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예컨대 덴마크 기술위원회가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합의 회의는 정책입안을 개선하는 수많은 참여방법중 하나다.⁴

핀란드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국가의 여론 통계는 “일반 대중이 신규 원전건설에 찬성하지 않은 반면 의회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새 원자로를 지지하는)은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 작성자들은 언론 보도의 “균형 있는 토론과 논조”가 원칙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고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의 내용이나 대중을 설득하려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또한 입법의 필요성과 완전한 정보제공이 동반된 의사결정 절차로 관심을 돌려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했다.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

미국의 사례 보고는 아이오와주 듀언아놀드에너지센터의 독립적 사용후핵연료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자발적인 정보제공 계획에 대해 논한다. 드라이캐스크 방식의 저장시설 프로젝트는 미국 NRC의 관리 하에 시행되었다. 지역사회는 승인은 필요하지 않았고, 사례 보고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측면에서의 대중적 협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원 프로

4. NEA/RWM/FSC(2003)10 참조: ‘이해관계자 참여수단, 선택 및 평가의 기준: 2003년 5월 22일 이해관계자의 확신에 관한 NEA 포럼의 4번째 회합에서의 주제회의 절차.

그럼은 시설 건설이 착수된 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해관계자들, 궁극적으로 대중에게 이러한 중요한 노력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소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가들 및 언론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다. 반원자력 단체가 언론에 미리 영향을 줄 위험성이 감지되었기에 시설대표자들은 언론이 일반 대중에게 “처리 시설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기가 어려웠다. 또 다른 위험요소는 연료운송계획 등과 같은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가 반대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었다.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들은 이런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들은 정보제공을 통해 주요 대상의 견해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원활동에는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브리핑을 비롯해 언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편집회이나 편집자에게 보내는 통신문, 시설견학, 방문객 의견, 언론과의 교류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에 담화를 제공하는 대변인실이 만들어졌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현장을 방문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참여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대답할 능력을 지닌 전문가들을 고용한 것과 다른 커뮤니케이션 경험자들의 언론 지원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지원활동 프로그램은 저장시설 방문자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데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긍정적인 보도내용으로 볼 때 언론에 미친 영향도 성공적이었다. 대중의 참여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이나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정계 및 언론의 핵심관계

자들의 관심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헝가리의 경우 파스 원자력발전소의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앞선 사례들과 다른 면이 보고되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들은 행사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동원해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의 승인에 정당성을 심어주기 위해 대중의 관심 및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파스가 선택한 방법은 참여에 호소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시민의 지적인 면과 여흥적인 면 양쪽 모두에 해당했다.

임시저장 시설의 용량 증설 없이 원자력발전소가 무한정 운영을 계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시설은 헝가리의 지속적인 전력공급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다. 놀라운 점은 국가적 사안인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원전운영자가 직접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시설 운영진은 대중에게 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했다. 국가의 공표가 있기 전에 지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파스발전소 직원들은 지역의 의사결정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승인을 얻어내는 것은 분명 힘든 과제였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로 발전소 주변의 여러 거주 지역에 갈등이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들이 뚜렷한 혜택 없이 리스크만을 공유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TEIT는 발전소 반경 12킬로미터 이내의 13개 지역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법에 의거한 단체였지만 실은 발전소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설립된 것이었다. 목표는 불공평한 보상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고 저장시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모든 가정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지역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이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었다.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는 대중 모임, 지역 TV 방송국 토론회, 퀴즈대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퀴즈대회는 13-14세의 아동들 1,50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고 성인 대상의 5,000명이 참가한 대회도 있었다(입상자들과 지역대표들은 영국의 월파 발전소 및 저장시설을 방문했다). 원자력협회 여성지부와 팩스 퇴직자 모임은 지역사회를 방문해 개인 및 그룹별로 대화를 나누었다. 개인적인 상담과 대화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 광범위한 참여에는 공동의 의사결정이 거의 없었다. 퀴즈대회나 토론회 또는 정보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의 견해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발전소 문제에 친숙해지는 것이 목표였지만 나아가 각 개인들이 실제로 시설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각종 행사 참가자들은 자신의 지적능력과 경쟁심을 개입시키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절차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필요에 근거하지 않은 사전 지원 노력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프로젝트와는 달리 오피니언 리더들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인구를 참여시키는 것을 추구했다. 팩스는 토론 및 대화와 퀴즈대회 등을 통해 이 사안이 대중에게 전파되고 진행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화들은 현장방문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지원활동은 시민의 지성과 호기심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핵심 의사결정권자들뿐 아니라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관계가 수립되어야 했다.

스페인의 사례는 트릴료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드

라이캐스크 저장시설에 대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다. 이 발전소는 트릴료시의회에 허가를 요청해야했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의사결정 당국뿐 아니라 국가 기관과의 대화가 필요했다. 앞의 예와 유사하게 트릴료 원전 운영자들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공식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지원활동 노력을 상세하게 전하지 않고, 대신 지지자들과 여러 의사결정 당국 간의 교류를 기술하고 있다. 스페인의 사례는 독자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이 어떻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타당하게 내려지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획을 승인한 이후 발전소는 트릴료 시의회에 공사 허가를 요청했다. 시(市)는 이 문제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했다. 시 법령상에는 그런 시설의 건설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장은 허가요청이 단순히 시의 문제를 넘어서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시급한 이유나 대중의 관심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회신은 돌아오지 않았고, 시의회는 각료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프로젝트를 보류했다. 일 년 후 발전소 운영자가 직접 장관에게 토지 및 도시개발 법률에 근거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에서 허가를 거부하고 발전소는 이에 반발해 지역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의회에서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승인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례는 합법적 수단으로 제공된 커뮤니케이션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방식을 강조한다. 참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지만 여러 다른 견해와 공식적인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시의회 의원, 여러 정당, 포함하여)과 협상하는 과정을 보

여준다. 본 자료의 제4장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에서 지역의 감정 및 견해가 무시되지도 않았고, 한편으로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허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승인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3개의 임시저장시설 사례는 지역사회 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자 이외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이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전략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치적 관계 문화에 따라 전략의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지지자들은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을 대상으로 반위자력단체가 부정적인 내용을 전파하기 전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다. 언론이 대립하는 견해의 토론장이기보다 중립 상태에서 어느 쪽의 의견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듯이 행동한 점이 흥미롭다. 보고서 상의 전략은 주제에 대해 숙고하는 사람들을 직접 끌어들이거나 참여에 초대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대중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명백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헝가리 팍스발전소는 반대를 제거하는 전략을 시행하지 못했다. 발전소 운영자는 적극적인 지원 및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불공평한 리스크에서 비롯된 갈등관계를 처리해야 했다. 저장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승인에 위한 타당성을 이끌어내려 했고, 신뢰구축이 언급되었다. 사실 사회적 신뢰 형성 및 그 활동에 대한 확신의 전제 조건은 정당한 산업 활동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다.⁵

스페인의 사례는 단계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여러 단계에서 반박

5. 활동의 정당성 및 사회의 신뢰형성 간의 긍정적 관계는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연구 네트워크인 TRUSTNET에 의해 조사되었다. 이 사례는 [<http://www.trustnetgovernance.com>]에서 볼 수 있다.

적인 토론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견해가 표명되고 기록되며 가장 다수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중앙 당국의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발생한 의사결정 실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사례는 단계적인 방식에서 의사결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원전시설의 장기간 폐쇄 이후 재가동 ❧

캐나다의 사례는 피커링에이사가 시 행정부의 동의 및 재가동 승인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피력한 내용을 기술한다. 캠페인의 목적은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그릇된 정보에 대응하고 피커링에이의 의견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이 사례에서 발전소 측은 금기를 없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발전소의 중요성과 실질적 안전 운영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원활동 프로그램은 대중과의 관계를 강력하고 단단하게 쌓기 위한 노력이었다. 지역사회의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임시처방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이다.

이 노력의 집중적인 목표는 주변지역의 주요 경제와 정치 관계자들 즉, “영향력 있는 관계자들”이다. 주민과 발전소의 고용인도 이미지 구축 캠페인의 공략대상이다.

발전소는 특히 과거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원자력 반대자들은 경고를 확산시키려했다. 한 시 의원은 발전소 관리자에게 “당신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명백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커링에이의 관리자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

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정부에 실시간으로 사건을 보고한 것은 시설 운영이 투명하고 고도의 안전성이 보장됨을 보여주었다.

전략적인 의사결정 분석과 적시에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환경평가가 재가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핵심단계임을 확신시키고, 환경평가의 결과 및 권장사항을 지지하는 통신문을 발송했다. 이는 상당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당국 허가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시설관리자들이 결과 및 권장사항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전소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산업계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목표로 한 활동의 일환으로 발전소 측에 의해 지역자문위원회가 결성되었다(규제기관이 아님). 이는 환경평가 캠페인을 위한 운영진 및 종사자 간의 협력조직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파트너십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성취할 수단을 마련한다. 피커링사의 대 시민업무 관리자를 비롯한 15명의 위원들은 수년 동안 매월 모임을 갖고 지역사회의 “이슈”를 규명하고 해결했다. 보고서에 그러한 이슈를 상세하게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160건의 안전을 인식하고 40건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해인 2001년에 해결됐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커뮤니티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활동한 “이해관계자 회의”도 언급된다. 이 회의에는 언론사도 참석했다.

지역주민들을 목표로 한 일련의 활동에서는 발전소 직원들이 자신의 거주지에 투입되어 24,000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정보 패키지를 제공했다. 요청이 있을 때면 직원들은 발전소 운영과 자신의 업무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인간적인 면”이 부각되었다. 다시 말해 이 계획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했다.

이웃 방문은 사회적 영향 평가상의 공식적인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재가동 승인의 맥락에서 직접적인 도구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적 교류 즉,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자연스런” 커뮤니케이션 및 대화에 매우 근접한 참여적 커뮤니케이션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가정방문은 재가동을 위한 지지를 얻기 위해 발전소의 긍정적 이미지를 목표 삼았지만(비디오 및 안내문을 제작해 각 가정에 배포했음) 한쪽의 이익만 생각한 행동은 아니었다.

현장 대표들(발전소 종사자)과 이웃의 상호간의 뜻에 따라 이뤄진 일대일 대화는 자유로운 형태로, 그 결과는 필수적으로 공개되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피커링에이의 이웃 및 수혜자들이 발전소 운영 및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아니다. 하지만 이 24,000 건의 대화가 발전소를 훌륭히 운영하려는 직원들의 의식과 책임감을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발전소 내의 조직과 안전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다른 활동들은 발전소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도와주었다. “기사 형식의 광고” 캠페인(이 자체로서는 참여적 방식이 아니다)은 방문객들을 발전소의 오픈하우스 및 정보센터로 유인해 묻고 대답하는 일대일 대화 기회를 만드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했다.

일본 토카이 원전시설 재가동에는 대중의 동의 및 승인이 더욱 시급했다. 피커링에이사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안 시의회의 상징적 지지를 얻었듯이, JNC의 재가동 제안은 문자 그대로 지역행정부 가 지역사회로부터 동의를 얻는 데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었다.

1997년, PNC-토카이 재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어진 방사능 유출로 시설은 폐쇄되고 조직에 대한 재정비가 실시되었다. 이어 당국은 시

설의 안전관리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재가동을 위한 지역의 허가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인 JNC는 재처리시설의 오픈하우스 초청, 공개 회의, 가정방문 설명회 등을 비롯한 인근 정보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보고에 따르면 이런 지식 개발 및 대화 기회는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대중의 확신을 다시 얻지 못했다.

토카이촌의 경제가 원자력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의존했기 때문에(주민의 1/3이 이 분야에 종사한다) 재처리시설 재가동에는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9년 토카이와 무관한 JCO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JNC의 재가동 추진은 중단되게 된다.

화재 및 방사능유출 사고 3년 뒤 안전관리에 대한 후속점검과 개선이 이뤄지고 난 뒤에야 JNC는 2000년 3월, 지역 행정부에 재가동을 다시 제안했다. 여기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시행되었다. 토카이촌 촌장은 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 정책에 관한 공개회의를 6차례나 열었다. 마을 사무소는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설문을 통해 시설 재가동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했다. 마을 행정부가 시행한 이 2개의 정책은 촌장이 이바라키현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심어주었음을 의미한다.

2000년 11월 토카이 의회는 시설의 재가동을 인가하고 한편으로 9개의 부가 조건을 부과했다. 이들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JNC-토카이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설립되어 2개 계획이 입안되었다. “사회적 이벤트”로 표현된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들은 전문가들과 대화하며 의견을 피력하고, 발전소 문제에 관해 지식을 쌓았다. 이 이벤트는 10회 개최되었다. 원자력 및 산업 안전위원회의 재정 지원 하에 자원주민, 마을공무원, 원자력전문가, 사회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C-큐브(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연구)라 명명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사례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거의 소개하지 않는 반면 토카이 주민들의 리스크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진전되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제공한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는 국가의 인식보다도 긍정적이었다(비록 사고로 인해 흔들리긴 했지만). 이들의 태도는 “인지 부족화” 즉, 원자력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이 시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의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토카이 사고는 이 사고 방식에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우려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원자력 관련 대화를 금기시 하는 분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금기를 완화시키는 정교한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확고이 유지되어온 믿음이 논의 대상이 된다.

2개의 재가동 사례는 시설에 대한 주민의 신뢰 및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특히 캐나다의 사례에서 시설종사자들은 지역 조사와 발전소의 향상된 안전성 입증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직원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일부에서 추정하듯이 직원들은 자신의 회사를 지지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고,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선입관은 직원들의 폭넓은 지지활동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능성은 분석되지 않는다. 직원들이 경영진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직원들의 지원활동이 대중들에게 발전소의 안전운영에 대한 지표로 인식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강력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다. 직원(또는 퇴직자)들이 발전소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여러 국가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심층 연구 및 토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또 다른 측면은 사례들에서 나타난 발전소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신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이다.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주체로 활동했다.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에 확립된 신뢰구축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자유의사인가? 이를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가?

∞ 안전 및 보안 ∞

안전 및 보안 사건과 관련된 스페인의 3개 사례(아세리눅스, 후스바도, 소리따)는 원자력 시설이 언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여러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준다. 3개 사례 모두 시간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원자력 반대자들 또는 언론이 문제를 포착하기 전에 사건에 관해 적절히 기술한 배포자료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아세리눅스 사례는 스페인 까디스(Cadoz)에 있는 중요한 제철소 용광로에서 방사능 테스트에 사용된 물질이 감지된 사건을 묘사한다. 이 사건은 제철소가 자체적으로 CSN에 통지했다. CSN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시설 내부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CSN이 운영하는 25개 대기감시 네트워크 기지와 시민보호부가 운영하는 900개의 기지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 어떤 비정상적인 수치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의 연구소는 아세리눅스 제철소에서 발생한 대기 중 방사능을 감지했다.

스페인 및 프랑스의 기상연구소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CSN은 방사능 유출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예상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다.

CSN은 사고와 관련된 두 가지 잘못된 통념 즉, 사건이 며칠 전에 발생했다는 것과 CSN이 이 사고를 프랑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생각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다. 언론자료를 두 번째로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CSN에는 그 사건을 가볍게 여긴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후스바도 제조시설의 빗물유입 사례에서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사고는 어떤 원전시설에도 발생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상황을 관리할 비상대비절차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었다. 돌발적인 기상조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과 특히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사항들, 메시지, 경로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설은 사상 최고치의 2.5배에 달하는 뇌우를 동반한 폭우에 직면했다. 배수 용량이 초과되어 빗물이 지붕과 바닥으로부터 공장 창고로 밀려들었다. 시설 관리자는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했다. 비상대책기구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했고,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전하는 관계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원활히 작동했다. 그 결과 언론보도는 객관적이고 적절했다. 이 사건은 원자력 또는 방사능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리파 원자력발전소 사례에 언급된 시설의 안전성 문제는 후스바도 사례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소리파 사례는 예상 밖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돌발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발전소는 5년간의 운영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에 항의해 그린피스가 소리파 발전소 외부지역에서 시위를 벌

였다. 정문을 지키는 발전소 보안요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12명의 그린피스 회원들이 반대편 경비 벽을 뛰어넘어 경보신호가 울리게 했다. 보안요원들이 침입자들을 가로막고 허공으로 경고사격을 발사했다. 그러나 그 사이 6명의 다른 회원이 재빨리 발전소 건물지붕으로 올라가 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스페인에서 원자력 발전의 종결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쳤다.

발전소 인력은 대응절차에 따라 행동했다. 비상대책을 발동하고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발전소는 심각한 절차 위반 즉, 물리적 보호 조치 불이행에 대해 처벌 받았고, 이 조치는 모든 언론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안전 또는 보안과 관련된 사건은 적용 수단과 커뮤니케이션 내용으로 볼 때 매우 긴급하고 민감한 것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은 “정상적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커뮤니케이션 시행자들이 항상 실제 리스크와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3개 사례는 모두 커뮤니케이션상의 정밀성 및 기술적으로 완전한 정확성과 이와 동시에 신속한 정보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매우 짧은 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폭넓은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의사결정권자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들이 3개의 필요조건(시간, 데이터정밀성, 기술적 정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원자력 관계자들의 이미지 또는 평판은 무너질 것이다.

아세리눅스 사례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할만한 기술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사례에서 낮은 방사능 수치를 신속하게 측정할 수단이 있었다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 도움을 주고 정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에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정보 전달자들이 오해하거나 사적인 견해로 대체하지 않을 만큼 완전해야 한다.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수록 적절한 보도는 더욱 어려워진다.

후스바도 사례의 경우 대중의 우호적인 이미지는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달려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좋은 이미지는 적절하고 안전한 운영을 기반으로 한다. “역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원자력과 관련해 어느 한 곳에 꼬리표가 붙을 때마다 이 꼬리표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소리파 핵발전소 경비시스템의 인간과 물질의 취약한 연결 관계에서 빚어진 결과는 장기간의 재정비 노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했으며 단기간 내에 제거되지 않았다.

평상시에도 언론과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유대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호적인 관계와 상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다. 이는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자 측의 정보가 반원자력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동등하게 취급될 것을 보장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전문화된 커뮤니케이션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보도기관(텔레비전, 국가 및 지역 신문, 지역 언론 등)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엄청나며 누구나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



06 사례 작성자들이 강조한 교훈

사례 작성자들이 커뮤니케이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아래에 요약한다.

∞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

- ※ 새 원전시설에 대한 정치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캠페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선 이미 가동 중인 시설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가능한 한 성공적인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신뢰할 만한 폐기물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잘 관리해왔어야 하며, 이에 따라 원자력산업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을 강화시켜야 한다. 핀란드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로써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는 제쳐두고 다른 사안들이 전면에서 검토될 수 있었다.

- ⌘ 교토의정서에 따르는 몇몇 국가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목표이다.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는 것(원자력 지지자들의 주요 주장인)은 덜 중요한 것 같다.
- ⌘ 원전 증설의 경우 대체에너지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원자력 증설 캠페인을 진행할 때에는 다른 에너지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원자력과 대체에너지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원자력 및 “청정”에너지의 동시 추진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국가정책의 초석이 될 수 있다.
- ⌘ 생태계에 우호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공익기업은 대중의 인정과 정부 지원을 받음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 ⌘ 여러 다른 환경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쟁점이 선택되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냉각수 배출과 교통 대책이다.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은 에너지공급 안정과 이산화탄소 억제이다. 안전시스템이나 특정한 원자로 설계와 같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중 토론의 초점은 원자로 안전이나 리스크 인식에 맞춰질 수 없다. 리스크 인식 및 원자로 설계는 대중에게는 다소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에 이를 검토할 유능한 과학자들은 많지만 일반적인 대중 캠페인에서 다를 주제는 아니다.
- ⌘ 원자력 운영자들은 원자력 관련 메시지를 덜 옹호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방향으로 이끌면서 대중에게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

보를 제공해야한다.

- ⌘ 더욱 많은 신뢰와 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원자력에 대한 “관점과 느낌”을 참신하게 바꿔야 한다. (로고와 브랜드).
- ⌘ 대중은 구경거리를 좋아하고 따라서 저널리스트들은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맨다. 다행히도 원자력은 극적인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산업이 어떻게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발전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새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는 가장 큰 단일사업 투자 중 하나다. 이러한 점은 충분히 관심이 집중될만하며 언론의 추적과 보도가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언론접촉은 프로젝트 관리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주제는 감정적인 사안이지만 원자력 산업 관계자들은 대개 이성적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한다. 효과가 있을까? 이제까지 논리적 주장은 감정에 대응하기에 비효과적으로 입증되었다.

∞ 원자력 지지자와 지원활동자간의 네트워킹 ∞

- ⌘ 국가 시설이 위태로울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주변지역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하는 것은 시설운영자 자신이다. 능숙한 대처에 의한 모든 관계자들 간의 조화와 결속이 적절한 대응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 만일 정부가 에너지 문제 토론을 공개하지 않으면 원자력폐기 반대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 ⌘ 모든 잠재적 지지자들(전문가, 정당, 노동조합, 산업단체, 비정

부단체 등) 간의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지지를 주장하는 일관된 입장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확고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준다.

- ⌘ 원자력 관계자들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통적인 기반 즉,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공동의 방식과 접근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

- ⌘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하여 통계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제이다.
- ⌘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지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은 일단 목표가 달성되어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 ⌘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혁신적인 접근방법, 공유된 정보, 고위 경영진과의 용이한 접근방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
- ⌘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상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책임 있는 관리자에 의한 상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 ⌘ 정부는 협의 절차 시 지역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가 어떻게 거기에 기여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철저히 알려야 한다.

❧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

- ❧ 원자력지지 측과 반대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목표대상(정치가, 저널리스트, 협회, 언론, 신세대 등)과의 사전 커뮤니케이션 및 대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에서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므로 웹사이트상에서 자료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라.
- ❧ 때때로 언론의 “공백”이 반원자력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언론이 거의 습관적으로 시청자나 독자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대비는 대중이 원자력과 친숙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정보제공을 위해 신문사 편집국을 방문하고 이해관계자들, 당당공무원, 언론 등에 시설견학을 시키면 보다 의미 있는 토론이 가능해진다.

❧ 정치권과의 조화 ❧

- ❧ 원자력지지 측과 반대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목표대상(정치가, 저널리스트, 협회, 언론, 신세대 등)과의 사전 커뮤니케이션 및 대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에서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므로 웹사이트상에서 자료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다양

한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신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라.

- ⌘ 때때로 언론의 “공백”이 반원자력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언론이 거의 습관적으로 시청자나 독자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대비는 대중이 원자력과 친숙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정보제공을 위해 신문사 편집국을 방문하고 이해관계자들, 담당공무원, 언론 등에 시설견학을 시키면 보다 의미 있는 토론이 가능해진다.

☞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의 관계 ☞

- ⌘ 지역당국과의 상호이익적 합의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안전 그리고 운영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 ⌘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 ⌘ 커뮤니케이션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 ⌘ 대중의 신뢰는 사전에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 ⌘ 일단 방침이나 의도가 결정되면 이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역사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환경과 원자력에 관련해 어떤 단체에 꼬리표가 달리면 이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 ⌘ 핀란드 사례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동원해 대중이 지지할 수 있

는 결과를 도출하는 타당한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나라의 여론 통계는 “일반 대중은 원전 증설을 지지하지 않지만 의회에서 긍정적인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새 원자로를 지지하는)은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 예컨대 그린피스나 소비자보호기구와 같은 일부 단체들은 다른 단체에 비해 공개적으로 커다란 목소리를 낸다. 비록 그들이 주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더라도 대중은 이들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대변자로 간주한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흔히 “내부 고발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원자력업계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고, 적절한 순간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 반핵단체들이 언론과 관계를 맺기 전에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조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트릴료의 임시저장시설 프로젝트 반대자들은 그 시설이 스페인의 모든 핵발전소의 집중 저장시설이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럴 가능성은 고려조차 한 적이 없기에 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긴급한 문제가 되기 전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라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 ⌘ 과학적 데이터와 증거만으로는 정치가들이나 대중을 납득시키기엔 부족하다. 원자력 시설을 폐쇄하거나 원자력을 폐기하는데 대한 의사결정은 순전히 정치적인 사안일 수 있다.
- ⌘ 과학자는 확실히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견해를 널리 알리고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

치와는 무관해야 한다.

- ⌘ 참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을 때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치 권력자들이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일치할 것으로 미리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 ⌘ 강한 확신만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 ⌘ 정확한 것이 중요한가 신속한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서 역설적인 점은 만일 정보가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된다면 그 정보는 불완전하고 수정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정보가 신속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실을 숨긴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 ⌘ 대중이 듣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 ⌘ 신뢰가 투명성과 관련이 있는가? 설명할 주제가 전문적일수록 관련단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원자력 같은 분야에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반드시 독립적이거나 믿을 만하다거나 또는 완전하거나 투명하다고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저널리스트는 비록 제공된 정보의 일부만을 기사에 싣더라도 단순한 정보전달자가 아니라 여론 전달자가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 기사는 편향적일 수 있고 이해관계에 얽혀있다고 여겨진다.
- ⌘ 텔레비전의 위력을 신중히 고려하라. 스페인의 소리파핵발전

소는 환경운동가들이 침입 장면을 촬영해 전국의 텔레비전 방송국에 배포하는 바람에 대중의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촬영분이 없었다면 전 언론사가 그 뉴스를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07

잠정적인 결론, 임박한 문제

원자력개발위원회의 데스크스터디 “원자력과 사회: 신뢰를 부르는 성공적인 소통법”은 의사결정권자와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 분석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성요소를 밝혀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6단계 대중 참여를 볼 수 있다. 가장 아래 단계는 “대중의 알 권리”이며 최상위 단계는 “최종결정에의 참여”이다. 오늘날에는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상당한 대중적 요구가 나타나고, 특히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 의사결정이 대중의 조언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언급하듯이 대중이 “얼마나 높은” 참여 단계에 오를 것인가는 여러 국가들의 관련 법안이 결정한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전문가들이 제출한 13개 사례를 분석하고 원자력 관계자, 의사결정권자, 시민단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기술한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 중 하나는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보고서에 수록된 커뮤니케이션과 원자력개발위원회의 데스크스터디 자체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 국가의 사례 분석에 의하면 이 연구가 실제적인 경제, 환경, 사회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특징짓는 데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과제가 적절히 밝혀졌다. 그러나 예컨대 커뮤니케이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등의 일부 특정한 부분에서 보다 심도 있는 조사나 후속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다. 사례 연구는 원자력산업계가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여러 사건들을 제시하고, 중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더 많은 경험을 수집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시행자들의 지식기반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앞 장에는 여러 사례들로부터 얻은 교훈과 원자력 분야의 각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아래는 각 사례로부터 도출된 핵심 결론을 요약한 것이다. 일부는 공개적인 질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보다 심층적인 토론의 소재가 될 수 있길 바란다.

☞ 커뮤니케이션 사례 ☞

- ☞ 대부분의 사례는 정보제공 및 지원활동 계획에 관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정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대중의 구성원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계획들의 주요 목표는 원자력 프로젝트에 관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의사결정 절차에 도움을 주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 높은 단계의 참여는 아니다.

- ⌘ 원자력 관련 협의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방법 중 효과적으로 입증된,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및 수단들이 있다.
- ⌘ 원자력 시설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주변 지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장 방문에서부터 지역당국에 실시간으로 사건을 알리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 ⌘ 커뮤니케이션 사례에서 훌륭한 점들은 운영자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 개방성, “금기”를 다루는 방법, 중대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원자력 지지자들의 조화된 네트워크, 원자력 반대 전략에 관한 폭넓은 지식,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관계자들의 사전 참여, 정치수뇌부의 개입, 객관적인 뉴스를 통한 반원자력 분위기에 대한 예측, 신세대에 다가가는 효과적인 도구로서의 인터넷 활용, 각각 전반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대중을 목표로 하는 분리된 전략, 커뮤니케이션 대상 그룹 및 신세대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독립적인” 전문가들(과학자)의 참여.
- ⌘ 대부분의 사례에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준비단계, 시행, 후속조치, 평가 등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자원 집약적이다.
- ⌘ 일부 사례작성자들은 에너지 생산의 다양한 수단에서 나타나는 위험이나 부담, 장점 등에 대한 비교 평가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이 평가는 위기관리를 통해 시설운영자들이 이해하고 다

루는 환경 및 안전관련 문제의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 ⌘ 비록 주요 관계자들(원자력 업계, 정부, 대중, 외부전문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었다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견되기도 한다.

🌀 커뮤니케이션에 내포된 위험 🌀

- ⌘ 어떤 사안이든지 언론에 의해 과장될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대비해야한다.
- ⌘ 일부 보고서에서 아주 극소량의 방사능이 유출됐을 경우라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문제는 원자력 운영자와 규제기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
- ⌘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비상시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할 책임 있는 관리자들과의 상시 감시가 필요하다.

🌀 정치적 의사결정 🌀

- ⌘ 일부 국가정책 의사결정 예시를 통해 하나의 입장에 만장일치 합의를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민주주의적 절차는 완벽한 보호 장치는 아니지만 다양한 관점과 그 영향력으로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 관계자, 전문가, NGO들은 지역 또는 국가 당국이나 의회 분과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청회 과정을 통해 가능한 “직접적인 접근”을 이용할 수 있다.

- ⌘ 보고서 중 하나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새 원자로 건설에 도움을 주었다. 비록 기존의 원자로에만 한정됐지만 이 해결책은 원자력에 대한 중요한 논점 즉,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관한 영향력을 완화시켰다.

∞ 미래를 위한 제안 ∞

추가 정보의 필요성

- ⌘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과 관련된 보고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보고되지 않은 설문 제출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유사한 두드러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들 중 일부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다룬 PIME 2004 컨퍼런스 또는 NUCNET 워크숍에서 볼 수 있었다. 향후 추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에 대한 영향

- ⌘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량 생산 시 원자력 에너지가 유발하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가장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이것으로 충분한지는 보다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 ⌘ 회원국들이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특히 이 기술의 폐기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교토의정서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회원국 정부는 정책 및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이 질문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 ⌘ 일부 사례에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개인은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이 논점을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포함시킬지 토의해야 한다.

대중의 인식 개선

- ⌘ 신세대들에게 에너지정책 및 전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에게 원자력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을 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역할이 향후 토론 주제가 될 수 있다.
- ⌘ 에너지정책 의사결정은 다양한 기준의 분석과 정치적 쟁점 그리고 과학적 판단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원자력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 ⌘ 데스크스터디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례 보고서는 대중이 원자력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원자력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 정도를 향상시킬 방법을 제시했다. 원자력과 관련된 주장과 현실의 이해 증진을 위한 대중의 참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례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제시가 필요했다.
- ⌘ 원자력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사안이지만 원자력산업 관계자들은 대개 이성적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한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

- ⌘ 제6장에서 기술된 교훈을 이용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종류의 전략이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성공에 도움이 될까?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 성공과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그 교훈은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상황에서 보편적인가 아니면 제한적인가?
- ⌘ 커뮤니케이션에서 4개 주요 관계자들(원자력업계, 정부, 대중, 외부전문가) 사이에 균형을 도출하는 방법을 분석해야 한다.
-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상세하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완전무결한 정확성보다 신속함이 더 중요한가? 긴급한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경로,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 훈련 및 정상적인 운영절차를 통해 위기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 대중은 구경거리를 좋아하고 저널리스트들은 이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원자력은 극적인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산업이 어떻게 호기심과 관심을 일으키는 발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원자력도 주목을 받을만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이 지구온난화나 식수부족과 같은 어려운 글로벌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 ⌘ 강한 확신만으로는 정보 전달에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원자력과 정치적 의사결정

- ⌘ 거의 모든 리포트에서 대중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의 정치적 환경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정부, 정치가들, 원자력업계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 ⌘ 경제, 사회, 정치적 맥락은 국가마다 에너지정책 입안에 대한 대중 및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정치권의 의사결정자들은 국가에 따라 동일한 기술적 근거를 가진 문제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벨기에의 AMPERE와 핀란드의 사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치가들이 원자력을 다루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가?

고용자와 직원의 상호작용

- ⌘ 거의 모든 리포트에서 대중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의 정치적 환경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정부, 정치가들, 원자력업계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 ⌘ 경제, 사회, 정치적 맥락은 국가마다 에너지정책 입안에 대한 대중 및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정치권의 의사결정자들은 국가에 따라 동일한 기술적 근거를 가진 문제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벨기에의 AMPERE와 핀란드의 사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치가들이 원자력을 다루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가?

부록 1

주요 기고자 리스트

오스트리아

만프레드 하인들러(Mr. Manfred HEINDLER)

벨기에

가스톤 메스켄스(Mr. Gaston MESKENS)

앨런 미켈(Mr. Alain MICHEL)

캐나다

도나 맥팔랜-의장(Ms. Donna MCFARLANE)

핀란드

마르티 캐트케(Mr. Martti KÄTKÄ)

프랑스

파니 바질(MME FANNY BAZILE)

일본

다케토시 다니구치(Mr. Taketoshi TANIGUCHI)

스페인

산티아고 산 안토니오(Mr. Santiago SAN ANTONIO)

미국

패트리샤 브라이언트(Ms. Patricia BRYANT)

존 로먼(Mr. John F. LOHMAN)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오디세프 파노폴로스(Mr. Odissefs PANOPOULOS)

OECD 원자력기구(OECD/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 개발 분과

사무국-코이치 시라가(Mr. Koichi SHIRAGA)

사무국-팔 코바치(Mr. Pál KOVÁCS)

원자력과사회 ②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소통법

1판 1쇄 인쇄 2010년 12월 26일

1판 1쇄 발행 2010년 12월 30일

지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옮긴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발행인 윤철호
펴낸 곳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통합커뮤니케이션 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4
등록 2005년 9월 28일(신고번호 제 2005-000008호)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